

제365호 (2012. 6. 18)

■ 경제 동향

- 가계 대출, 2003년 이후 연평균 40조원씩 지속 증가

■ 정책 · 경영

-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 건설 생산 체계의 혁신
- 주거 복지의 실현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 정보 마당

- 정부, 물산업 중점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2020년 1등 건설산업을 위해

가계 대출, 2003년 이후 연평균 40조원씩 지속 증가

- 가구당 평균 부채액 최근 지방에서 급격히 늘어나 -

■ 4월 가계 대출 2.5조원 증가

- 예금 취급 기관의 4월 중 가계 대출은 전월의 소폭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됨.
 -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은 전월 0.1조원 감소에서 2.5조원 증가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주택 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를 보인 가운데 기타 대출(마이네스통장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이 전월 1.3조원 감소에서 1.1조원 증가로 전환된 데 기인함.
 -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도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상호금융(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월중 증가폭이 확대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0.5조원 → +0.9조원), 비수도권(+0.4조원 → +1.6조원) 모두 증가함.

※ 예금 은행 및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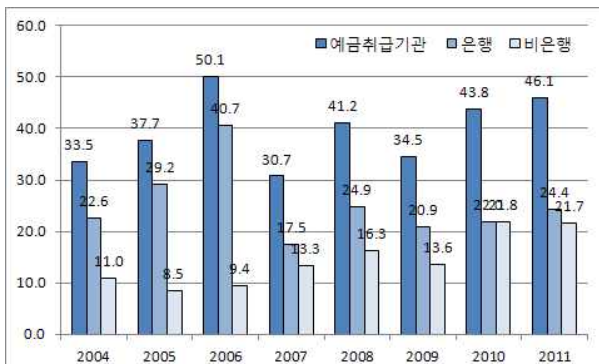
- 가계 대출은 2003년 이후 연평균 40조원씩 증가하여 올 4월 말 현재 639.6조원에 달함.
 - 최근 2년 연속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액이 연평균 증가액을 상회함.

<가계대출 추이>

(증감액, 조원)

구분	2011 연중	2011			2012			12.4월 말 잔액	
		1~4월 중	3월 중	4월 중	1~4월 중	3월 중	4월 중		
합계	46.1	10.2	2.8	4.4	0.0	-0.1	2.5	639.6	
기관별	예금 은행	24.4	6.2	1.7	2.5	-1.4	-0.4	1.3	454.5
	비은행	21.7	4.0	1.1	1.8	1.4	0.3	1.1	185.1
지역별	수도권	23.7	6.6	2.1	2.3	-1.1	-0.5	0.9	412.2
	비수도권	22.3	3.6	0.8	2.1	1.1	0.4	1.6	227.4

<연간 증감액(조원)>



자료 : 한국은행

<가계 대출액(조원)>



■ 가구당 평균 부채액 지속적인 증가세

-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003년부터 191만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현재 3,680만 원에 달하고 있음.

- 수도권은 2007년 3,888만원에 달하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연평균 240만원씩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845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지역별 가구당 평균 부채액>

(단위 : 만원)



주 :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가계 대출(한국은행)을 추계 가구(통계청)로 나눈 값임.

- 지방은 2007년 1,978만원에 달하던 가구 평균 부채액이 연평균 145만원씩 증가하여 최근 2,557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급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가계 부채 증가로 주택 경기 활성화 난항, 실질적인 지원책 필요

- 가계 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가구당 평균 부채액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 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는 최근의 스페인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 경기가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만기 연장, 주택 구입 이자 비용의 소득 공제, 세제 완화, 금리 지원 등이 필요함.
- 기업은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공기 단축과 기업의 이윤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금융권이 부실화된 데 기인함.

엄근용(연구원 · kyeom@cerik.re.kr)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건설 생산 체계의 혁신*

- 중소기업/하도급 보호를 강화하되, 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병행해야 -

■ 저성장 시대...공급 과잉 시장에 대응하여 건설업 등록 체계의 정비 필요

- MB 정부에서는 과거 미국·영국 등에서 추진된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발주 방식의 다양화, 업역 규제 완화, 상생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전되었음. 그러나, 외국과 국내의 사회·문화 환경이 다르고, 획일적인 제도 중심의 건설 환경하에서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발주자나 건설업체 모두 건설시장의 글로벌화, 탈도급(脫都給), 발주 방식 다양화, 시공 분야 전문화, 직접 시공 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차기 정부의 주요 건설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 종합과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의 부분적 허용 : 예를 들어 여러 동(棟) 건축공사중 1개 동을 하도급하는 것은 일괄 하도급에서 예외 인정
 - 과잉 자격자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 추진(Over-Qualification)
 - 등급 제한 입찰을 확대하되, 상위 업체와의 공동 도급보다 해당 등급 업체 간 경쟁 유도
 - 대/중소기업 간 공동 도급시 분담 이행이나 기술 이전 등 실질적 효과 추구
- 건설업역 간 충돌을 방지하고, 특정 공종의 분리발주 등 업역 이기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잡다기한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 「건설산업통합법」의 제정 필요
 -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기관에 재량권 부여
 - 건설업체가 건축사 보유시에는 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 업무 허용 등
- 페이퍼 컴퍼니 및 부실 업체 퇴출 → 우량 업체 육성
 - 2012년 6월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11,451개 사, 전문건설업체는 47,312개 사에 달하여 공급 과잉 상태로 평가됨.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최근 5년 간 1만개 사 이상 증가
 - 공공공사의 입찰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건설업 등록 요건 강화 및 면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등록 단계에서 스크리닝 강화 필요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12일 개최한 '차기정부의 건설·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게재되어 있음.

■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하여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하도급 간 장기 협력 관계 구축 유도**

- 상생이나 공생은 정책적 목표로서 바람직하나, 주계약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대금 직불, 발주자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일부 공종의 분리 발주 등은 시공 완료 후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지며,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하도급이나 장비/자재 구매에서 1회성 계약이 증가하면서 장기 협력 관계 와해 우려
 - 공사 발주 체계를 왜곡하기보다는 하도급 법령을 활용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고, 하도급 협력 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의 중복적인 하도급 규제의 일원화 필요
 -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하여 발주자-원도급자, 원하도급 간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경우, 거래 비용의 절감과 함께 생산성 향상, 공사비 감소, 공기 단축, 품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노임/자재/장비 대금 및 공사 대금의 체불 방지 대책 강구
 - 자재/장비 대금이나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지급 보증(Payment Bond) 의무를 부여
 -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청구권 제도의 도입 필요
- 숙련 인력 확보 및 특화된 전문 기술인력 육성
 - 건설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하여 임시 변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기술인력은 과잉 상태에 있으나, 해외 기술인력은 오히려 부족하므로 병역특례나 해외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품질 관리나 안전/환경/공정/원가 관리 측면에서 특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 필요
- 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 강구
 - 건설업 총 재해자 가운데 5인 미만 현장의 재해자 점유비가 68%에 달하며, 재해율도 건설업 평균(0.7%)의 5배 수준인 3.6%에 달하므로 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을 저감하기 위해 빌딩인스펙터(Building Inspector, 건축검사원) 제도의 운용 검토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주거 복지의 실현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 ·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 자가 거주 촉진 -

■ 주거 복지 실현의 장애 요인

- 공공 임대주택 물량은 부족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성은 낮아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치 않음. 더욱이 자가 거주율이 낮아지고 있어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11.6%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장기 임대주택의 비율은 5.4%에 불과함. 또한, 전세 임대 등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시도 중에 있으나 물량이 한정적이고 여전히 시장에 정착되지 못함.
 - 임차 가구 중 절대 다수인 81.3%가 개인(다주택자 등)이 제공하는 민간의 양성화되지 않은 임대주택시장을 이용하고 있음.
 - 전세 위주의 임대차시장이 형성되면서 민간 임대주택의 소득 수익률은 낮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자가 거주보다 임차를 선택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005년 55.6% 수준이었던 자가 거주율이 2010년에는 54.2%로 낮아짐.

■ 주거 복지의 실현 3대 과제

-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의 실현은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자가 거주 촉진 등 3대 과제의 유기적 역할 수행에 있음.
 - 주거 복지의 지원은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라 임차와 자가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지원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가 가능함.
 - 최저 소득 계층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차원의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공공의 재정적 한계, 민간 임대차시장의 절대적 비중, 급증하는 임차 가구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없이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적극적인 자가 거주 촉진책을 통해 재정 투입을 줄이고 수요자에게는 보다 양질의 주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12일에 개최한 ‘차기정부의 건설·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게재되어 있음.

거 안정과 주거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공공 임대주택 비율 목표 10%

-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0%까지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과거 정부의 의욕적 계획과 달리 공공 임대주택은 부족하며, MB 정부에서는 공공의 역할 중 분양 주택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됨. 현재 임대차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또한,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공공 임대주택 시장에서도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주거 개선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현재의 장기 거주보다 중기 거주 목표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임대주택사업은 단기적 경기와 연관된 사업 영역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이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세제, 택지 등)이 필요함.
 -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공급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함.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자가 거주 촉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

- 자가 거주를 원하는 구매자의 소득과 계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거주 목적 주택 구입자의 소득, 자산, 연령, 지역 등 세부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의 재검토, 소득 공제 대상 주택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책 필요
 - 수요자 금융 지원을 통해 주택 지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리의 자금 대출, 대출 규모 확대 등도 필요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정부, 물산업 중점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강화와 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

■ 급성장이 예상되는 블루골드 물산업 글로벌 시장

- 세계 물시장은 약 5,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및 조선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의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기후 변화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의 확보, 대규모 홍수 예방, 친수 공간 개발 등의 새로운 시장 형성도 전망됨.

<세계 물시장 전망 : 2007년 규모 → 2025년 시장 규모>

(단위 : 백억 달러)

구분	소재, 건설, 컨설팅, 설계	운영, 관리 서비스	합 계
상수	6.6 → 19.1	10.6 → 19.8	17.2 → 38.8
하수	7.5 → 21.1	7.8 → 14.4	15.3 → 35.5
해수담수화	0.5 → 1.0	0.7 → 3.4	1.2 → 4.4
물 재이용	0.1 → 2.1	-	0.1 → 2.1
공업용수 및 폐수	2.2 → 5.3	0.2 → 0.4	2.4 → 5.7
합계	16.9 → 48.5	19.3 → 38.0	36.2 → 86.5

자료 : Global Water Intelligence(2008),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9차 이행 점검 결과 보고 대회 자료에서 재인용

- 물산업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신시장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의 지출이 많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물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물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성과

- 정부는 원천 기술의 개발 및 연관 산업 육성, 전문 물기업 및 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물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힘써 왔음.
- 국산화율 100%의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 하천 복원 기술 개발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 친환경 대체 용수 산업의 활성화 정책 구현

* 본고는 지난 5월 23일에 개최된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 대회」에서 논의된 물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상하수도 분야에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공동 운영과 위탁 확대, 물산업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취업 확대, 물산업 통계 및 종합 정보 시스템(www.wabis.or.kr) 구축
- 수주 여건의 개선 및 수출 기반 확보, 해외 건설 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강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통합 물관리 상품 개발 및 수출 시도

■ 글로벌 4개 권역별 물시장 진출 전략

- A 권역 : 경제 규모가 크지만 수자원이 부족하며 수질 악화 등으로 개발 수요가 풍부한 중국,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 등
 - 선진 물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있으나 담수화, 물 재이용 등 도시 기반 시설 정비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민관 합동 동반 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50만호 건설,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 등의 도시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연계된 수처리 시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
- B 권역 :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개발 재원도 부족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
 - 미개척 초기 물 시장 공략 전략이 요구되므로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한 상징성이 큰 물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와 진출 기반 마련
 - 알제리 아인세프라 하수처리장, 아제르바이잔 압쇄론 반도 물 랜드마크 사업 추진
- C 권역 :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많은 북미, 유럽 등을 포함한 주요 선진 국가 등
 - 선진 물 전문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신규 사업 수주 기회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틈새 시장 공략과 장기적으로는 종합적 수처리사업 수주 추진
 - IT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로 경쟁력 확보,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4대강 살리기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진출 도모
- D 권역 : 풍부한 수자원으로 치수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정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남미, 동남아시아 국가 등
 - 성장이 예상되는 전통적 물시장의 공략과 함께 무상 원조 활용 및 투자 개발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략
 - 파라과이-파라나 수로 사업의 4대강 모델 기술 적용, 필리핀 카난 수력 발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아시아 워터 펀드를 이용한 네팔·라오스·필리핀 등 신규 수력 발전 사업

김원태(연구원 · wont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1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기업도시 계획 기준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규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EWS 지표 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5월 주택·부동산시장 주요 지표에 대한 점검
6. 15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담당관실 주최, 중기 재정 전략-주택 부문 자문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주택 부문 중기 재정 전략에 대한 자문 수행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지점 주최, 인천 지역 경제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발표 주제 : 인천 지역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정책 제언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제3차 하도급개선협의회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 - 서울시의 하도급제도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한 토론

■ 신규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존 건설산업의 반응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 2010년 4월 그리스, 11월 아일랜드, 2011년 4월 포르투갈의 EU와 IMF에 대한 구제 금융 신청을 전후하여 이들 국가의 국채 수익률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구체화됐음.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 관련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통화 및 경제 통합 관련 제도 장치의 강화로 재정 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초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존이 고금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유로존의 경제 성장 추이에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1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유로존 건설 경기 동행 지표인 건설산업, 건축 부문, 토목 부문의 생산지수의 최저치는 최대치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임. 유로존 재정 위기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강화하여 자금 흐름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PF 대출 및 주택 수요를 구성하는 가계 대출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존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 저탄소 녹색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 교육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6. 26(화)~28(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전망과 동향 / 자금 조달 / PF 사례 연구 / 현금 흐름 분석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Tel. 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2020년 1등 건설산업을 위해

2012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향후 5년 간의 각종 국가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총선이 있었다. 총선의 고유한 성격 탓도 있지만 최근 사회적인 시류는 건설산업을 전면내세우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다. 올해 있을 대선 역시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현재 건설산업의 모든 섹터는 신시장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비단 건설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내 상위 5~10대 건설회사는 이미 사업 포트폴리오의 과반 이상을 해외로 전환한 상태다. 미래 성장과 관련한 공식 회의석상에서 국내 대표 기업의 임원이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충격을 받았다. 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이 국내 시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적 대형 건설사업의 이슈화는 그 적정성 여부를 떠나 건설산업만을 배불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 경제에 큰 몫을 한 건설산업의 역할을 다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억울한 면이 많겠지만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나빠진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건설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건설산업과 연관된 관(官)·산(産)·학(學)·연(研) 모두에 해당된다.

일방향식 접근에 익숙하여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보였던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건설산업이 소비자와 맞닿은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이 일을 벌이면 국민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곧 편해지겠구나”라는 사회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건설 투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인재가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어 미래 산업으로 성장 가능하다.

답은 이렇듯 간단하지만 실천은 어려울 수도 있다. 빨리 짓고, 싸게 공급하고, 안전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제도·기술·사람 모두 혁신해야 한다. 좋은 재료가 맛난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건설산업의 제반 인프라를 양질의 상태로 바꿔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건설산업은 글로벌 1등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울경제, 2012. 5. 14>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